

정치권 “운명 가른다” 전운 고조

친박계 “일선 불사”與 갈등 증폭 규탄집회 개최 등 野 전방위 공세 MB 후반기 국정·대선판도 영향

정부의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전방위로 증폭될 전망이다.

부처 이전 백지화 및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골자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 주류 측은 초반 여론의 흐름이 전체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신(新)세종시’는 돈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첨단경제도시’라는 점을 집중 강조하는 반면, 세종시 원안은 수

도를 사실상 분할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9부2청2청 이전’ 원안에 자족도시 기능을 보강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친박(친 박근혜) 진영은 일선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약 60명에 달하는 친박계의 도움 없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의 갈등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부터 고조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겨냥한 감정적인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위험 수위를 넘나들 전망이어서 경우에 따라 ‘분당사태’에 가까운 절체절명의 위기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 핵심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10일부터 세종시 수정 반대를 위한 규탄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세종시가 기업특례도시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물론 블랙홀처럼 다른 지방으로 가려는 기업을 전부 빨아들여 결국 지방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 내부의 반목은 물론 충청권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역차별 반발 등을 엮어 지방선거 구도를 이명박 정권 심판으로 몰아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 처리 결과는 여야 간의 단순한 국정쟁악력 다툼을

넘어 각 당 및 차기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검승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종시 문제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향배를 가를 잣대가 될 전망이다.

수정안이 탄력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지만 좌초되거나 동력을 상실해 표류할 경우 국정장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여권 내부의 역학구도는 물론 차기 대선판도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종시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모두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정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폭박력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그 파장을 가능하게 힘들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충남 계룡산 등반에 앞서 세종시 원안 사수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野 장외투쟁 나서

야권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수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10일 충남 공주 계룡산 동화사 입구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결의 등반대회’를 갖고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전국 시도당에서 모인 당원, 당직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정세균 대표와 송영길 박주선 안희정 최고위원, 이명경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수정안 내용은 이미 원안에 다 있는 것”이라고 수정안을 평가절하하며 “마치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당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 원안추진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오늘부터 거짓말쟁이의 대명사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갖는 한편 14일엔 경북 김천 혁신도시를 방문,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반대여론 결집을 시도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본부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혁신기업도시를 무력화하는 이 정부의 오만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수정안을 저지할 것이며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모든 정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들이 들어서는 신도시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11일 이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진 뒤 류근찬 원내대표, 이상민 정책위의장 등 소속 의원 5명이 삭발식을 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친이 “박근혜 제왕적 총재 보다 더하다” 친박 “朴 前대표 인신비방에 배후 있다”

한나라 계파간 난타전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친 박근혜)계가 사활을 건 전쟁에 나섰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두 계파는 상대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양 계파가 피로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선 형국이다.

특히 이번 대결은 현재 최고 권력과 미래의 가장 유력한 권력의 충돌로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이 직계 정태근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전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수정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 “박 전 대표는 60명이 넘는 의원그룹을 이끄는 한나라당의 지도자”라며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귀를 닫고 자

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도자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당헌에 당론 변경을 위한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이 변경돼도 반대’라고 미리부터 밝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해당(害黨)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같은 친이의 정두언 의원도 이날 ‘박 전 대표님에게’라는 공개질의서에서 “최근 박 전 대표 주변의 중진 의원들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할 때마다 박 전 대표는 그들의 입장에 책임을 박았다”며 “박 전 대표는 과거 제왕적 총재보다 더하다는 세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친이 등 여권 주류 측에서는 세종시 수정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아닌 4

월 국회나 그 이후로 처리 시점을 넘기자는 게 골자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킬 시간이 필요한 데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법개정 관문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월 국회 처리는 무리수라는 판단인 것이다.

친박계는 이날 세종시 원안 고수의 대안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친이의 공격에 대응했다.

친박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인신비방이 릴레이로 전개되고 있다”며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배후가 있고 세력이 있다”고 이 대통령 측을 겨냥한 뒤 “한쪽에서는 설득 운운하고 한쪽에서는 일에 못 담을 비안전을 펼치는 것은 저급한 정치놀음이고 없어져야 할 구대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

다.

그는 이어 “세종시 원안 건설은 이 대통령께서 직접 수심차례 자발적으로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꺼우도 지켜야 도리”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지금까지는 원칙과 신뢰훼손이 수정안 반대 이유였는데 이젠 두가지가 됐다”며 “세종시에 특혜가 몰리면 타 지역의 엄청난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박의 한 중진 의원은 “충청권의 지지를 못받으면 차기 권력창출은 어려워진다”며 “세종시 건설계획이 근본적으로 잘 됐다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권이 만들었으면 책임지고 잘 되도록 하는 게 의무”라며 원안을 옹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청와대 ‘정중동’

청와대는 1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최종 수정안 내용을 보고받음으로써 사실상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향후 여론수렴과 법안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과 조율을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내일 정 총리가 발표하는 수정안의 내용이 이미 확정된 만큼 이제는 조용히 기다

리는 일만 남았다”면서 “오늘 이 대통령도 공식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세종시 발전의 청사진을 내놓은 만큼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은 휴일인 이날도 수정안 발표 이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과 함께 발표문 문구를 최종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에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언론을 상대로 세종시 발전방안의 취지를 알리는 등 마무리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과 정치권 설득을 위한 최종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의 입장표명 방안과 충청권 방문 계획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